

농지서 버젓이 중고차 매매...허가·신고도 없었다

SOCIETY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서구 매월동 중고차매매단지 일부 업체 토지 불법전용 누유로 토양 오염 우려도...구 "시정 안 하면 고발조치"

광주의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단지인 서구 매월동에서 일부 중고차 매매상이 허가받지 않은 농지를 주차장과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에서 나오는 누유 현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방문한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공터에는 수십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는 인근 중고차 매매상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매물로 승용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품용 차량은 반드시 번호판을 제거해

아 하지만 대다수 차량에는 버젓이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였다.

실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는 이곳에 있는 다수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공터가 토지이용계획서 지목상 '답' (畓)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 마늘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답의 경우 농지법상 엄격한 보호 대상으로, 이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전용)과 관련한 허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용이 승인되면 지목도 '답'에서 '대'



광주 서구 매월동 일부 중고차 매매상이 허가받지 않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주차장'에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법적으로 농지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지목변경을 비롯해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됐다.

농업 생산, 농지개량을 할 수 있는 토지에서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을 전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만약 전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된 토지에 차량을 전시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토지에서 차량 매매 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등록된 전시시설 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하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오일, 기름 등 각종 오염물질이 떨어져 토양오염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토지 소유주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자체가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중고차 매매상 관계자는 "수리 등을 이유로 임시로 차량을 세워둔 것이지만 매매 차량을 주차해 두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토지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주차된 차량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점점 후 농지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34 달출 16:22
 맑음 19:25 달진 03:36



광주	15~19
목포	15~18
여수	15~19
순천	14~18
구례	13~20
광주	15~19
임도	15~20
흑산도	13~18
진남	13~19
고흥	13~19
진도	15~19
목포	00:09 / 12:20 셋물(저) 05:27 / 17:43
여수	07:10 / 19:44 셋물(저) 01:02 / 13:14

'검찰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중국서 범죄...국내 피해자 23명 피해액 9억원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해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이의형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께 중국 웨이하이시 일대 한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8억 9105만원의 가루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서울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금융사기 피의자나 성매매 사건 피의자로 몰아세운 뒤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공범에게 연결, 공포심을 조성했다.

이후 "불법대출 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현금을 전달해 줘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과 만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사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때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대통령선거 포스터 점검 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강제징용 판결 3년이나 묵힌 대법원 규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헌법적 책무 이행 촉구

광주시민단체가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을 3년여 동안 묵히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헌법적 인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별다른 다듬의 여지도 없는 이 사건을 3년째 묵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역사 정의를 외면한 것을 넘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자 괴롭히기'에 가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양금덕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2022년 5월6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2023년 1월6일) 강제매각 사건(특별헌법회명령)이 각각 계류 중이다.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1심, 2심을 거쳐 2022년 5월6일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법원은 사례 없는 초고속 판결에 대해 '지연된 정의의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며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 말이야말로 정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에 호소해 왔던 말이다. 90대 피해자들이 입술이 부르드도록 외쳤던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함으로써 전범기업들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대법원의 침묵과 방조는 더불어 일본 정부와 일제 전범 기업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배짱'과 '용기'를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어 기존 판결을 뒤집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왜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느냐"며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가? 이라고도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권이 일제 전범기업 앞에서 농락당하고, 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끝내 비극적 생을 맞이했던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과연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목과 방조는 더불어 일본 정부와 일제 전범 기업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배짱'과 '용기'를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어 기존 판결을 뒤집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왜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느냐"며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가? 이라고도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권이 일제 전범기업 앞에서 농락당하고, 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끝내 비극적 생을 맞이했던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과연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술에 우울증약 타 먹인 아내

만년필 ○남편을 잠들게 하고자 소주에 우울증약을 타 먹인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아.

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배트남 국적 A씨(36·여)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북구 자택에서 남편 B씨(62)에게 소주에 우울증약을 타 먹인 혐의를 받아.

A씨는 소주 4잔을 먹고 몸에 이상을 느낀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불려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가루로 만들어 소주에 탄 것으로 확인.

A씨는 이혼 속려 기간 중이지만 자녀를 보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A씨는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약을 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경찰청·GJT모빌리티, 시민 안전 강화 승객용 모니터 활용 보이스피싱·딥페이크 예방 영상 송출

광주경찰청은 8일 카카오톡모빌리티 파트너사 GJT모빌리티와 손잡고 전국 카카오톡택시 승객용 모니터를 활용한 치안 시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생활 교통수단인 택시 공간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통안전, 딥페이크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접근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5월 한 달간 전국 카카오톡블루 승객용 모니터 활용,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이는 최근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

AI 기술을 악용해 사람 얼굴, 목소리, 말투 등을 조작,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교통안전, 스피킹 등 다양한 치안 시책에 대해 공감형 스토리 기반 영상을 제작. '일상 속 체감치안' 향상에 나선 방침이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술력과 공공기관의 사회안전망이 결합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유로 173 대연빌딩 3층 (상무지유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0